



# 장애등급제 개편 이후 장애인정책 동향

서 해 정 한국장애인개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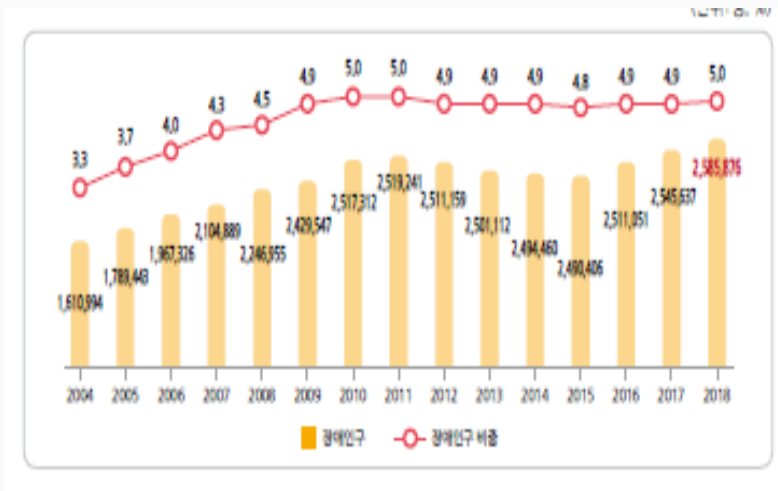


## 장애인 인구 및 복지 현황

# 1. 장애인 인구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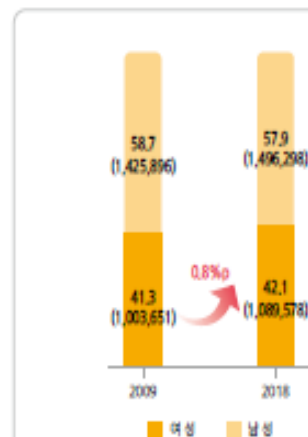
1) 인구현황 : 2018년 말 기준 전체 등록장애인 수 2,585,876명, 전체인구 대비 5.0%

2) 성별, 연령대 구성 : 여성장애인 42.1% 2009년 대비 0.8%p 증가, 65세 이상 비율 46.7%로 2009년 대비 10.9%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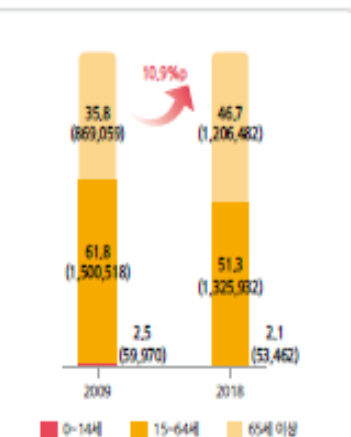


출처 : 한국장애인공용공단 고용개발원, 한눈에 보는 2019 장애인 통계

● 성별 구성(%, 명) 2009, 2018



● 연령대별 구성(%, 명) 2009, 2018



# 1. 장애인 인구 현황

3) 장애유형별 구성 : 지체 47.9%, 청각 13.2%, 뇌병변, 시각 9.8%, **발달 9.0%**, 정신3.9%, **중증 32.3%** 경증 1.9%p증가(20

4) **65세 이상 인구 : 46.7%**

(고령사회 14%, 초고령 사회20% 전체 인구 현재 1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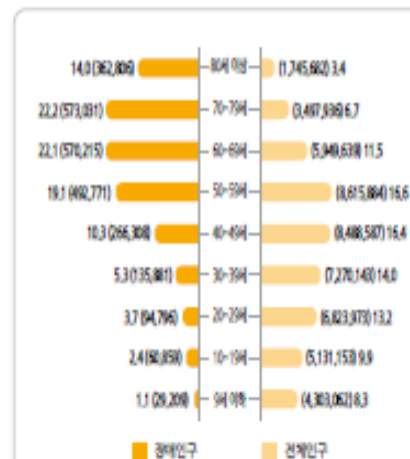
● 장애유형별 구성 (%) 2009, 2018



· 주 1: '중증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조의 기준을 따른 것으로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일부 장애 유형의 경우 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포함함(뇌병변·시각·지체·지체성·정신·심장·호흡기·뇌전증장애와 상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 2018년 지체 3급 장애인의 경우 2018년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명부의 장애부위 정보를 활용하여 산출한 지체 3급 상지부위 장애 비율 36.7%를 적용한 추정치임

· 자료: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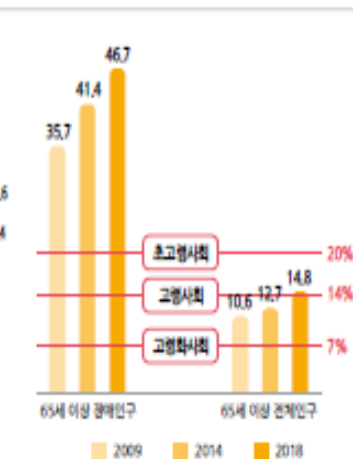
● 연령대 비율(%, 명) 2018



· 주: 65세 이상 인구 비율 = (65세 이상 인구 / 전체 인구) × 100

· 자료: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각 연도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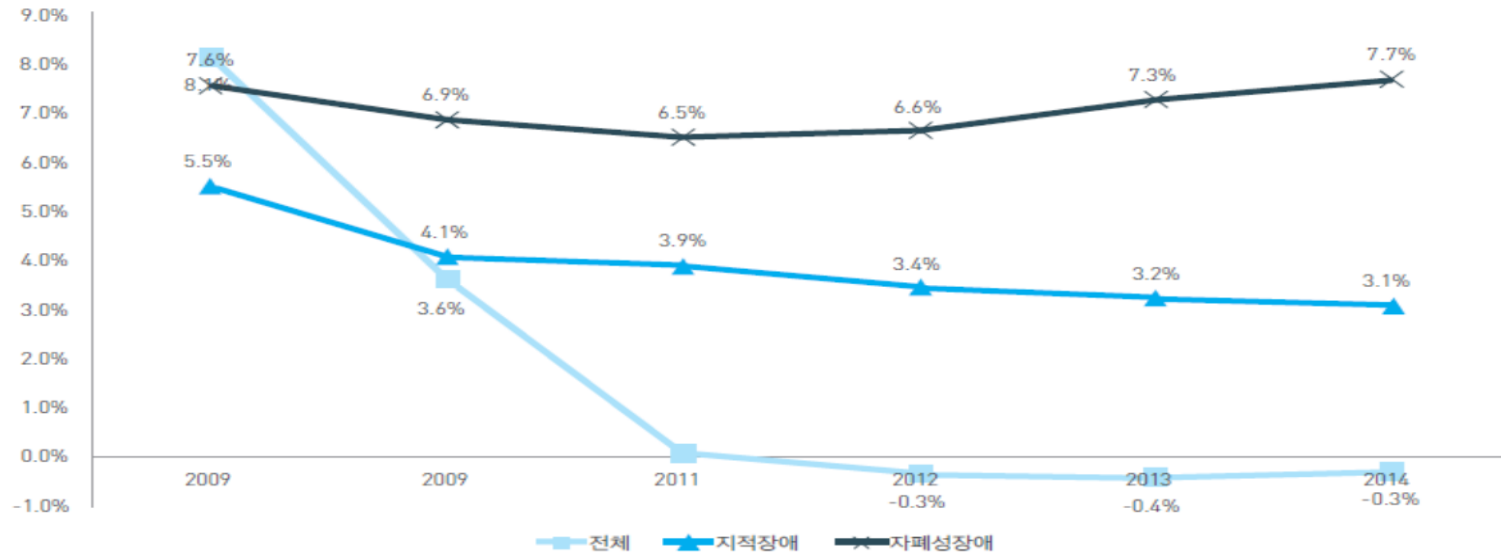
● 고령화-65세 이상 인구비율(%)



## 1-1. 발달장애인 인구 현황

### 5) 발달장애인 현황

발달장애인 비율 233,620명(전체 장애인 인구의 9.03%) , 지속적 증가추세)



[그림 4] 전체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출현율 변화

출처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4). 2014 장애인실태조사

## 1-1. 발달장애인 인구 현황

### 5) 발달장애인 현황

발달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206,917(88.6%), 자폐성 26,703명(11.4%)

- 지적장애인 장애정도 : 1급 50,503명(24.4%), 2급 72,445명(35.0%), 3급 83,969(40.6%)

- 자폐성장애인 장애정도 : 1급 10,472명 (39.2%), 2급 12,158명(45.5%), 3급 4,073명 (15.3%)

- 지적장애 아동 연령별 인구 : 전체 장애아동 72,618명 중 지적장애아동 34,557명(47.6%)

0~13세 48,247명 중 지적 20,875명(26.7%), 14~17세 24,371명 중 13,682명(56.1%)

### 6) 발달장애인 고령화 비율 가속

- 2009년 45세 이상 발달장애인 34,045명, 2017년 57,775명, **8년 동안 1.6배 증가**

### 7) 발달장애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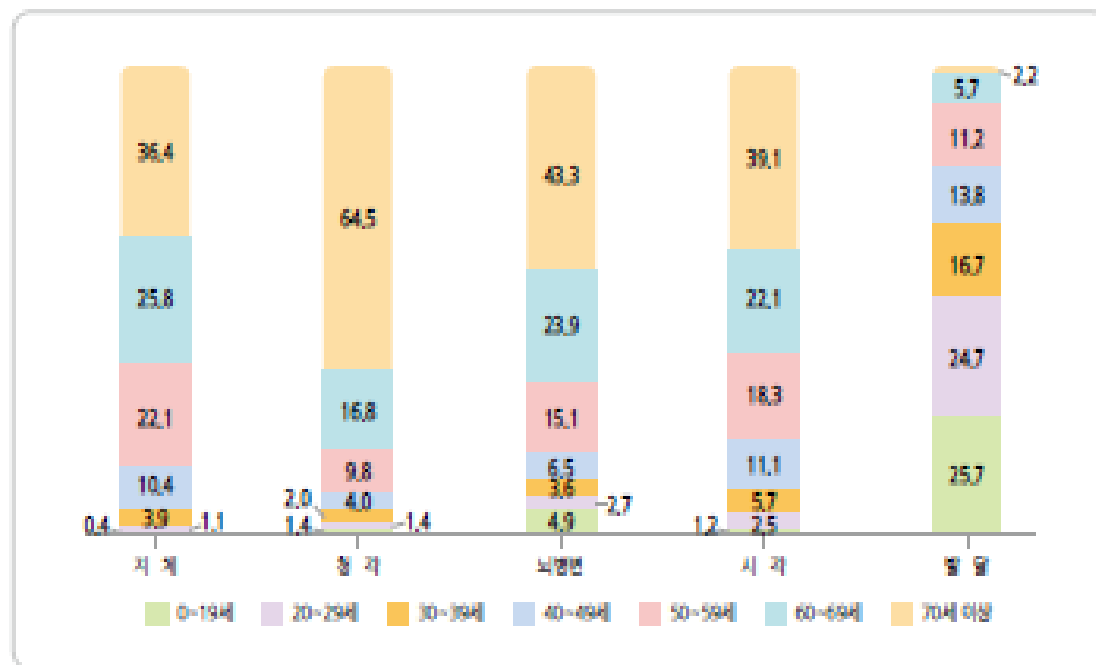
- 지적장애인 중 지적장애만 존재 68.92% 약 70%

- 자폐성 장애인 중 자폐성장애만 존재 61.62%, 나머지 정신장애 동반

# 1-1. 발달장애인 인구 현황

\* 청각장애인 65세 이상 비율 64.5%, 발달장애인 조기 노화 심각

● 장애유형별 연령대 비율(%)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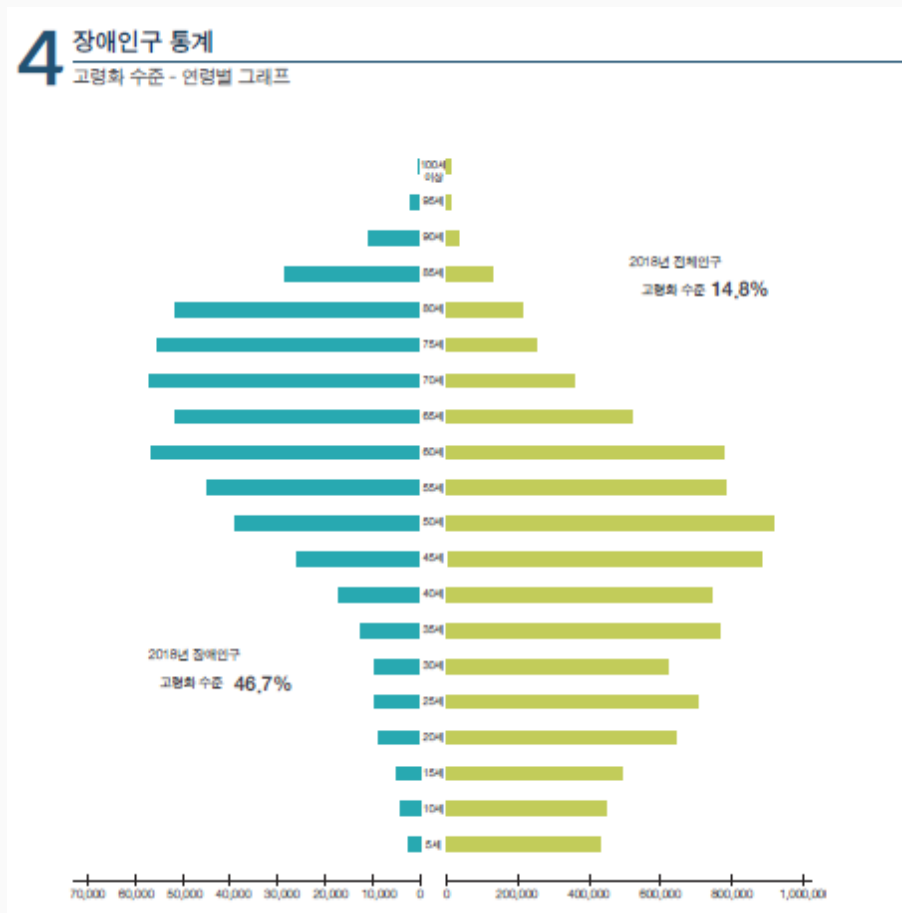
· 주 1: '장애유형별'에서는 비율이 높은 상위 5개만 비교. 단 발달장애는 지체장애와 자폐성장애를 합친 것임

2: 장애유형별 연령대 비율 = (장애유형별 해당 연령대 인구 / 장애유형별 전체인구) × 100

· 자료: 보건복지부, 「등록장애인 현황」, 2018

- 출처 : 2019 장애인백서 고령화 수준-연령대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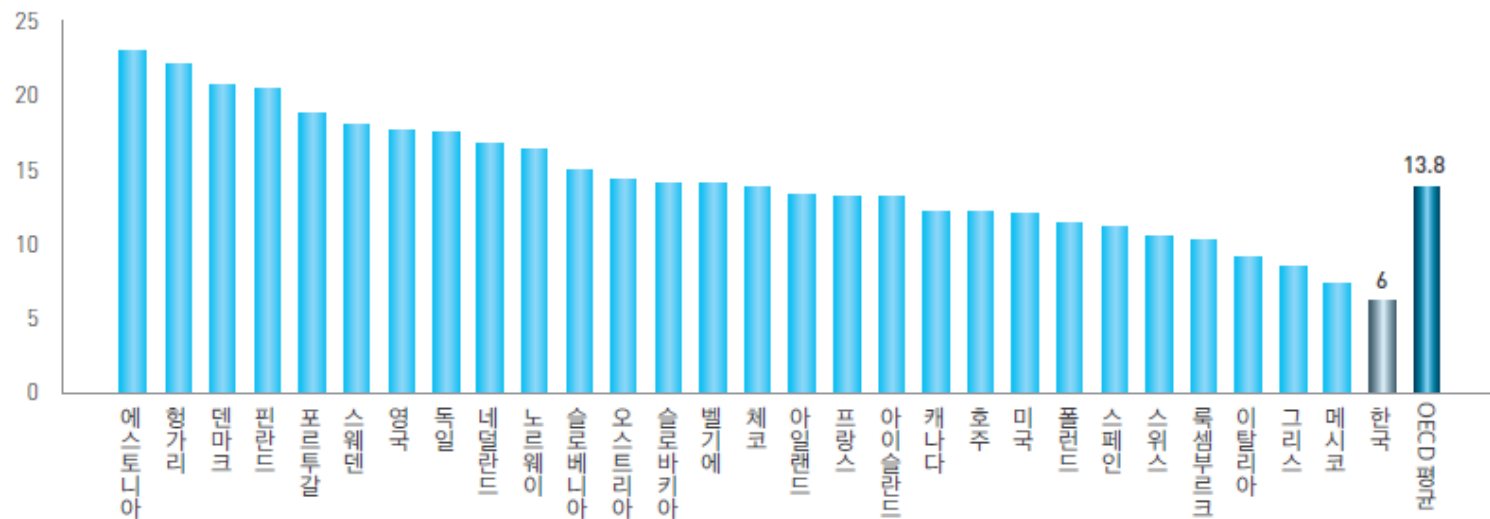
( 의료기술의 발달, 교통사고의 감소 등 질환이나 사고와 같은 장애의 후천적 원인 발병의 감소 등이 원인으로 해석됨)





## 장애인 인구현황에서의 시사점

### 1. 장애등록 문제, 전체 인구 대비 등록 인원 5% 수준 유지 ( 2010년 5.0%~)



[그림 1] OECD 국가별 장애인 출현율(2000년대 후반)

## 장애인 인구현황에서의 시사점

2. 여성장애인 전체 장애인구의 40% 성인지적 감수성, 성인지적 정책 필요

(여성장애인정책의 한계, 장애인정책국내 장애인서비스과가 주무부처)

여성장애인 내 다양한 집단의 문제 (다문화가족 내 장애여성, 장애여아, 발달장애여성 등)

3. 고령장애인 증가 -> 돌봄과 질환의 문제 중복, 장애정체성 문제

4. 장애유형 지체장애인 전체 장애인의 50% 이하(척수장애인 유형 분리 요청, 보조기기 발전 등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측), 정신적 장애인 증가 매년 3% 정도, 특히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 문제

2020년 기준

지체(47.7%) > 청각(13.2%) > 뇌병변, 시각(9.8%)

## 장애인 인구현황에서의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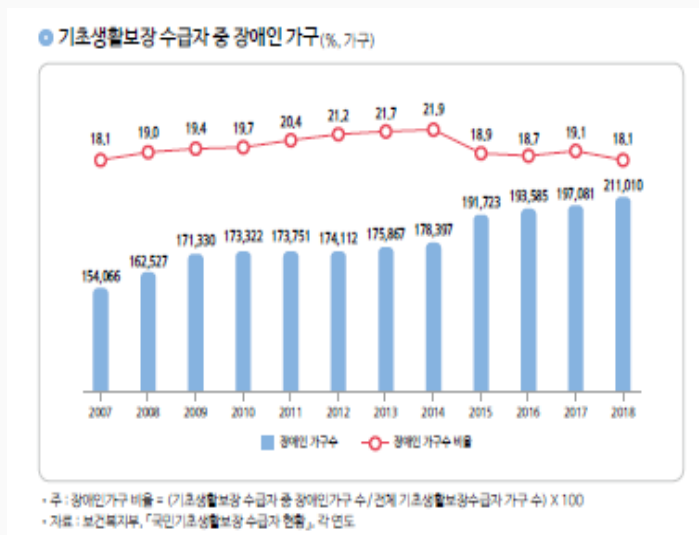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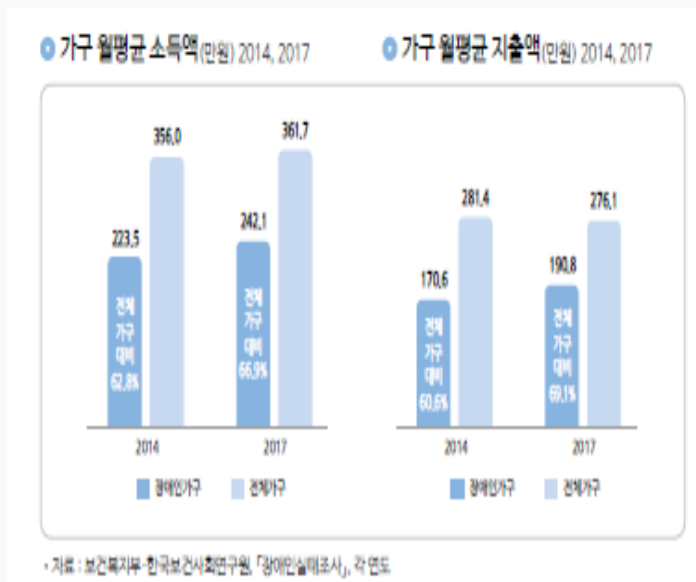
### 5. 정신장애인

제 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을 적용 받는 장애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정신장애인의 대한 혐오, 차별 심각

## 2-1. 장애인 경제생활

- 1) 경제생활 : 2017년 장애인가구 월평균 소득 액 242.1만원, 전체 가구 대비 66.9%
-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장애인 가구 : 2018년 장애인가구 211,010가구 (18.1%)



## 2-2. 장애인 보건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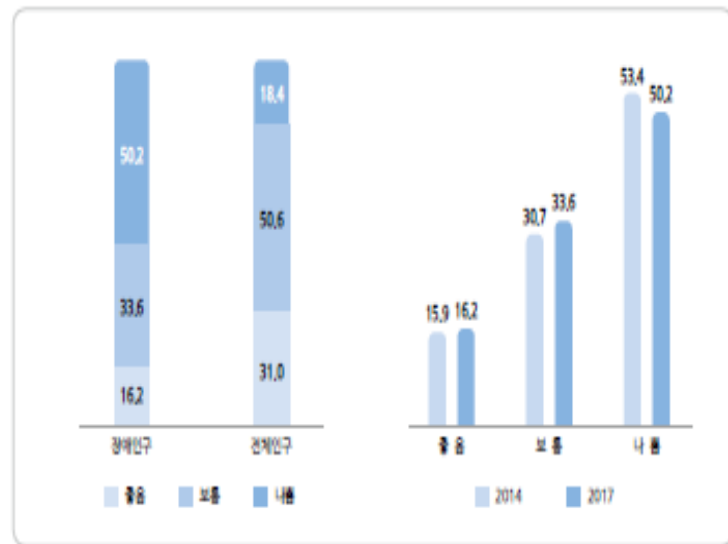
1) 주관적 건강상태 : 2017년 장애인구 나쁨 50.2%, (전체인구 18.4%)

2) 장애인 조사망률(인구 10만명 당) : 2016년 장애인 2813.0명 (전체 인구 549.4명의 약 5배)

● 주관적 건강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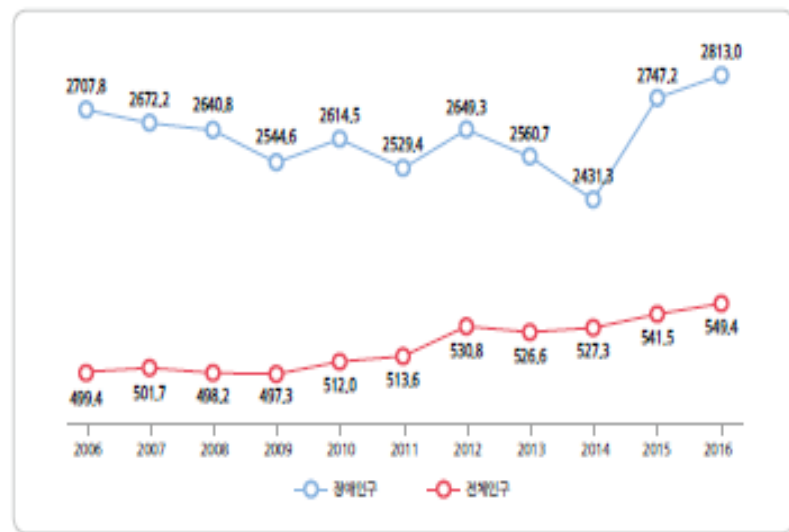
〈전체인구 비교 2017〉

〈연도별 비교 2014, 2017〉



• 주: 전체인구는 우리나라 19세 이상 일반 국민의 주관적 건강상태임(국민건강통계, 2016)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각 연도

● 장애인 조사망률(10만명당명)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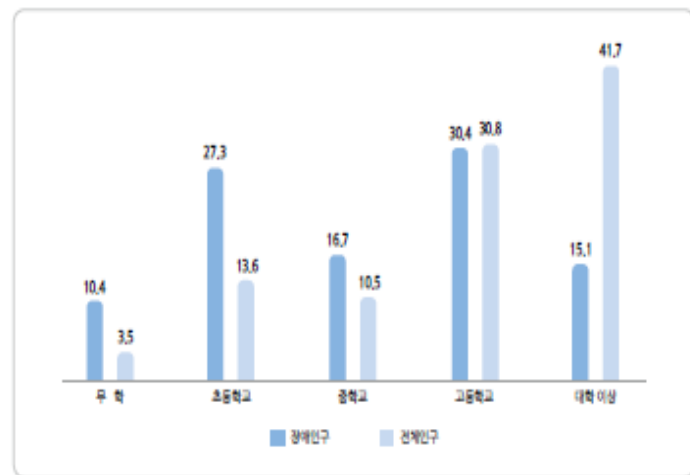


• 주: 조사망률 = (1년간 장애인 사망자 수 / 해당연도 연앙인구) X 100,000  
 • 자료: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2016년도 장애와 건강 통계」, 2016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각 연도

## 2-3. 장애인 교육

- 1) 교육정도 : 2017년 장애인구 무학 10.4%, 초졸2) 특수교육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률 : '18년 특수학교 8.6% ( 2013년 21.3% 12.7%p 감소),

27.3%  
● 교육 정도 (%) 2017



· 주 1: 6세 이상 대상

2: 전체인구는 2015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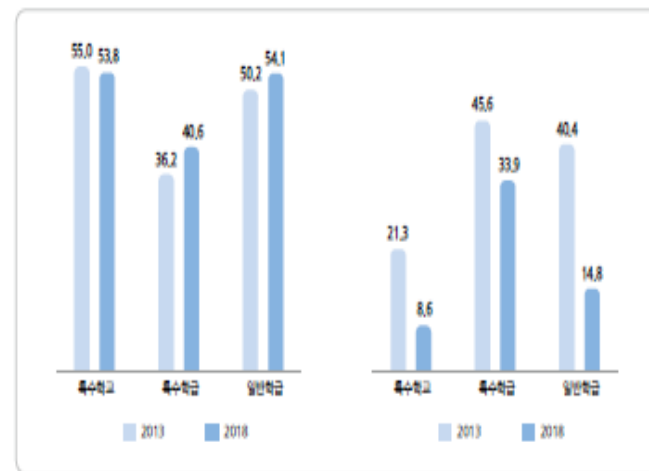
3: '대학이상'은 대학(3년제 이하)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포함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2018 / 통계청, 「2015 인구주택총조사」, 2016

● 특수교육대상 고등학교 졸업생 진로 현황 비교 (%)

〈진학률 2013, 2018〉

〈취업률 2013,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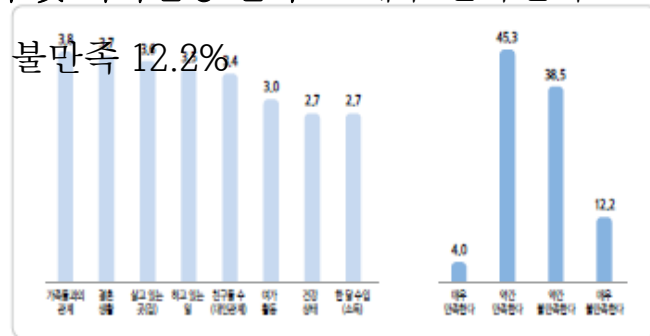
· 자료: 교육부, 「특수교육연차보고서」, 각 연도

## 2-4. 장애인 생활 및 여가/ 장애인 차별경험과 인식

1) 생활영역별 만족도 : 2017년 가족들과의 관계 3.8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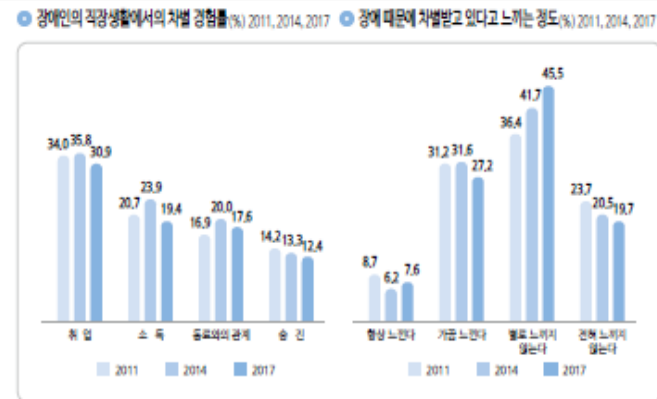
가장 높음, 건강상태 2.7, 한달 수입 2.7 등이 가장 낮음.

2)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 매우 만족한다 4%에 불과,  
매우 불만족 12.2%



· 주: '생활영역별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매우 불만족 = 1, 매우 만족 = 5)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2018

3) 장애인의 차별 경험 및 느끼는 정도 : 2017년 취업 분야에서 30.9% 차별 경험, 차별 항상 느낀다 7.6%, 전혀 느끼지 않는다 1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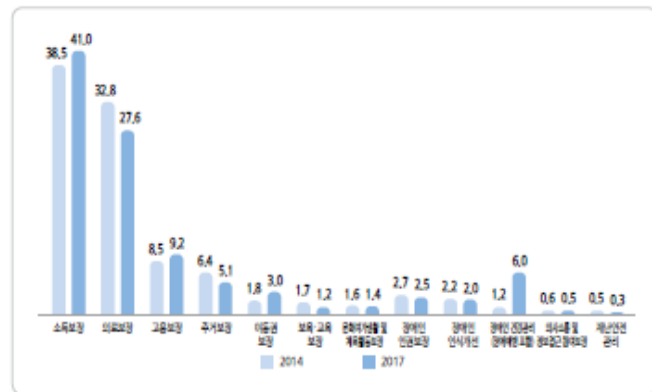
· 주: '직장생활 차별 경험률'은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률을 조사한 결과에서 직장생활에 관한 부분만 제시  
·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각 연도

## 2-5.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욕구

1)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욕구 : 2017 소득보장 41.0%, 의료보장 27.6%, 고용보장 9.2%, 주거보장 5.1%

2)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장애인복지사업 : 2017년 연금수당 32.9%, 의료 21.5%, 생활서비스 15.4%, 일자리 15.0%, 장애인 이해 및 포용사회 분위기 조성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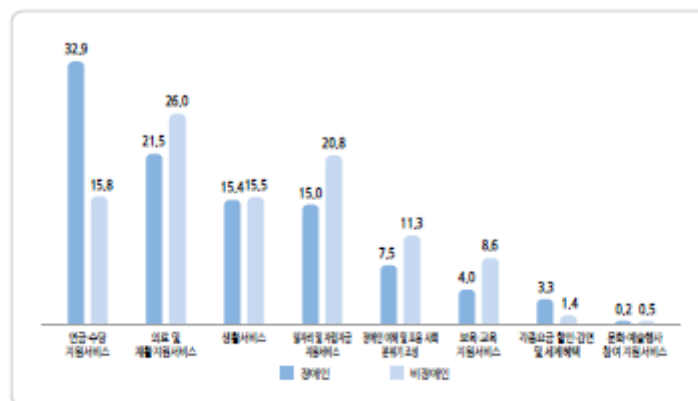
● 장애인의 복지 서비스 욕구 (%) 2014, 2017



· 주: 기타 항목 제외

· 자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실태조사」, 각 연도

● 우선적으로 확대 실시해야 할 장애인 복지사업 (%) 2017



· 주: 기타 항목 제외

· 자료: 통계청 「2017년 사회조사」, 2017





## 2021 주요 장애인정책 동향

## <문재인 정부 장애인 정책 주요 성과>

<b>정책 방향</b>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	<b>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b>
--	------------------------------

□

대상·서비스 확대	자립기반 강화	건강권 보장	권익·안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 장애등록제 개편</li> <li>•('20) 부양의무자 폐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9) 장애인연금 인상</li> <li>•('19) 장애인 일자리 확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확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8) 발달장애인 생애별 종합대책 수립</li> </ul>

· (예산확대) '17년 2조 778억원 → '21년 3조 6,783억원(77% ↑)

· (법령정비) 장애인복지법 개정('17.12) 등급제 폐지 장애인연금법 개정('20.1) 수급자 확대 장애인건강권법('20.12) 개정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설치 근거 마련

## 0. 장애인복지법 분석

---

\*장애인복지법 제3조(기본 개념)

-장애인복지의 기본개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 \* 장애인복지법 주요내용

장애인복지법은 법적 성격으로 볼 때, 사회법,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 사회복지서비스법, 장애인의 인 권/재활/복지에 관한 기본법, 장애인 기본권 보장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함.

- 제 1장 총칙( 제1조 ~ 제16조) : 목적, 장애인의 정의 등, 기본 이념 등
- 제2장 기본정책 강구( 제17조 ~ 30조) 장애발생 예방, 의료와 재활치료, 사회적응훈련 등
- 제3장 복지조치 (제31조 ~ 52조 ) 실태조사, 장애인등록,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연구
- 제4장 자립생활지원 (제53조, 53조, 55조(활동지원급여의 지원), 제56조(장애동료간상담))
- 제5장 복지시설과 단체 (제57조 ~제64조)
- 제6장 장애인보조기구( 제65조 ~ 제70조)
- 제7장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제71조~ 제 78조)
- 제8장 보칙
- 제9장 벌칙

## \* 장애인복지법의 문제점과 과제

### (1) 장애 개념, 용어 수정

제2조 (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 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국제장애인연맹의 ‘장애’정의 기초로 변경할 필요 있음

(장애는 물리적, 사회적 장벽에 기인하여 다른 사람과 동등한 수준에서 지역사회의 일상의 생활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 또는 제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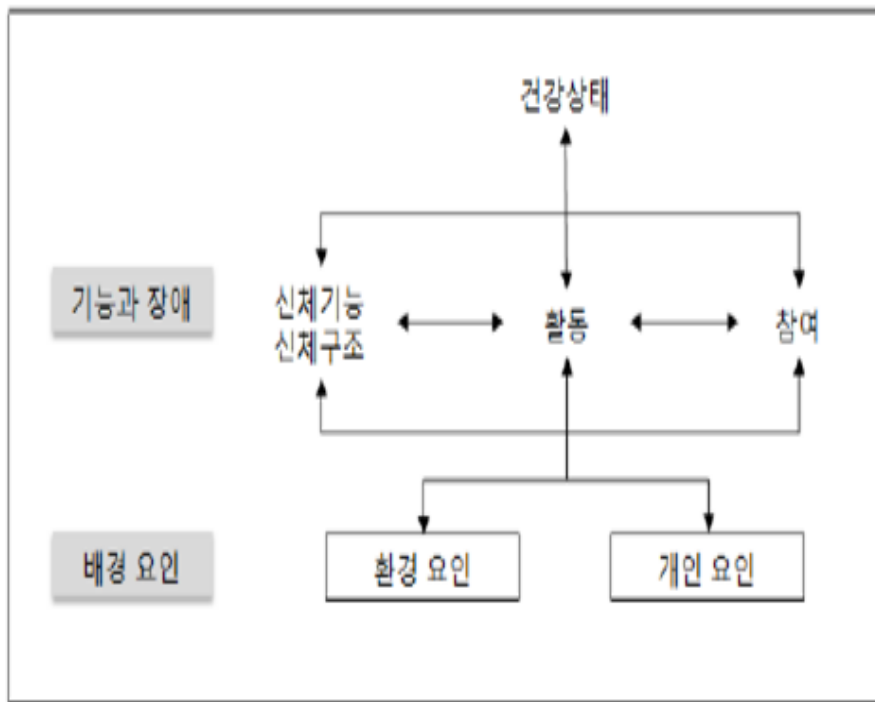
-> 국제기능장애건강분류 (ICF)

- ❖ 손상과 장애 구분이 주요
- ❖ 의료적 관점 : 손상 → 장애 → handicap( 결점, 단점, 불리한 조건)
- ❖ 사회적 관점 : 손상 / 장애 ← 사회

척수장애인, 휠체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뇌성마비 장애인, 시각장애인 등 맞는 용어인가?

disabled person, handicapped person , people with different abilities

a physically challenged person, visually-handicapped person



[그림 2-1] ICF 모델

출처: WHO(2001); WHO(2002), p.9.

〈표 2-1〉 기능과 장애의 구성요소 및 1단계 분류

신체	
<b>신체기능:</b> 1장 정신기능 2장 감각기능 및 통증 3장 음성 및 말하기 기능 4장 심혈관계, 혈액학적, 면역학적, 호흡기계의 기능 5장 소화기계, 대사 및 내분비계의 기능 6장 비노생식기와 생식기능 7장 신경근육골격 및 운동과 연관된 기능들 8장 피부와 관련된 구조물들의 기능	<b>신체구조:</b> 1장 신경계 구조 2장 눈, 귀 및 관련 구조 3장 발성 및 언어관련 구조 4장 심혈관계, 면역계 및 호흡기계 구조 5장 소화기계, 대사계, 내분비계 관련 구조 6장 비노생식기계 및 생식기계 관련 구조 7장 운동관련 구조 8장 피부 및 관련 구조
활동과 참여	
1장 학습과 지식 적용 2장 일반적 과제와 요구 3장 의사소통 4장 이동 5장 자기관리	6장 가정생활 7장 대인관계 8장 주요생활영역 9장 공동체, 사회 및 시민생활
환경요인	
1장 제품과 기술 2장 자연환경과 인위적인 환경 변화 3장 자원과 관계	4장 태도 5장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

출처: WHO(2002), p.16.

\* 출처 : 2017 장애인백서

**-> 미국장애인법(ADA) :** 장애의 범위 안에서 현재 손상을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손상의 이력을 가지고 있거나 손상되었다고 인식됨으로 인해 사회에서의 완전한 참여로부터 배제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음

❖ 신체기능의 저하가 원인이 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장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사회로부터 배제당하거나 억압을 당하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고 이 자체가 장애가 되는 것임.

❖따라서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사회적 배제 기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임

❖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손상이 아닌 사회의 억압으로 볼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정책수단( 현 : 동정과 자선, 치료, 재활 등 특별한 보호와 복지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인식)은 사회적 억압을 제거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

**=> 차별 철폐, 인권 확보**



## (2) 권리성의 보장

-장애인복지법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장애인기본법적 성격을 추구하고 있음.

-그러나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내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의무라기 보다는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차원의 의무조항에 그치고 있음.

-제10조(국민의 책임)은 장애인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는 선언적 차원일 뿐 실제로는 별 의미가 없음. ->삭제 필요 ?

제9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국민의 책임) 모든 국민은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의 조기 발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초하여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1조 (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3) ‘재활’이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

자립생활 모델에 따르면, 문제는 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사와 환자’ 또는 ‘전문가와 클라이언트’ 관계에서 의존을 유발하는 특성이 있는, 재활 모델이 제공하는 해결책에 있음( DeJong, 1979). 왜냐하면, 재활 모델에서는 비장애인 위주의 ‘정상’이라는 목표를 만들어 놓고 장애인을 변화시키려 할 뿐 장애인 자신의 선택권과 결정권은 강조되지 않기 때문임. 이에 바로 재활과 그 과정이 해결책이 아니라 문제의 일부로서 보이는 것이며, 그렇다면 재활 모델은 지양되어야 하는 것임.

-> 재활모델에 의해 장애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바꾸어야 함, 장애인복지법에서 ‘재활’용어 최대한 사용하는 않는 것을 일부에서는 주장하고 있음.

예 : 직업재활-> 고용

**TABLE 01** 재활패러다임과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비교

항목	재활 패러다임	자립생활 패러다임
문제의 정의	신체적 손상, 직업기술의 결여, 심리적 부적응, 동기 및 협동심의 부족	전문가, 친인척 등에 대한 의존, 부적절한 지원 서비스, 건축물 장벽, 경제적 장벽
문제의 소재	개인	환경, 재활과정
사회적 역할	환자/클라이언트	소비자
문제의 해결책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상담사 및 기타	동료상담, 옹호, 자조, 소비자통제, 장애물 및 불리한 조건 제거
통제자	전문가	소비자
기대성과	일상소득능력 극대화, 실질소득을 얻는 취업, 심리적 적응, 동기부여, 치료완료	자기주도(self-direction), 환경 제약의 최소화, 사회적 경제적 생산성 향상

출처 : 정립회관 역(2003). 신체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

\* 출처 : 2017 장애인백서

#### (4)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용어 사용의 문제

제3조 (기본이념)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

-> 장애인을 사회의 현 상태에 적응/동화시켜야 하는 내용 포함, 장애인 일방의 통합 요구, 일방통행식의 통합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노력하며 구현해야하는 통합된 사회를 기본 이념으로 삼아야 함.

통합사회( inclusive) 라는 용어 사용 적절

(주류화/ 통합/ 포함/ 포용 등 용어 개념 정리)

따라서 장애인복지법은 그 이념에 맞도록 체계화되기 위해서는 사회참여와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나열하는 노력이 필요.

거의 모든 복지조치 등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법의 실효성을 위해  
강행규정으로 개정되어야 함.

## 4) 장애인법의 입법 체계 과제

### (1) 기본법

### (2) 권리보장법

-> 장애인복지법 개선 안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통하여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있다.

이에 시설보호의 차별적 환경과 인간존엄에 대한 문제 인식

**탈시설, 사회통합, 자립지원**은 장애인 정책의 핵심 의제

## 0. 장애인 정책 목표 및 범위

- 정책 방향

: 평등( 비장애인과의 격차 해소)

자립생활 (장애인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과 통제를 허용하는 환경을 보장하는 인권)

- 범위 : CRPD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포용) ( living independently and being included in the community)
- 1975년 장애인권리선언 “ 동일한 연령의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기본적 권리, 즉 무엇보다도 품위 있는 생활을 정성적으로 최대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 2) 탈시설 지원
- 3) 지역사회 통합 돌봄



# 1. 제5차 장애인정책(2018-2022) 발전 5개년 계획

-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장애인정책종합계획)
- 1차('98-03) ~ 4차( 13~17)
- 제5차 장애인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복지국가' 라는 국정기조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
- 비전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 6대 분야 27개 중점과제
- 장애인단체요구사항 :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탈시설화

\***자립생활** :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 결정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것, 자립생활의 핵심은 장애인 당사자 스스로 선택하는 권한의 부여

\*\* **포용사회** : 2019년 혁신적 포용국가 원년 “ 공존과 상생”, 성별, 지역, 계층, 연령에 상관없이 차별이나 배제 받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는 사회

\* 장애인종합계획 4대 핵심영역

### 장애인 복지·건강서비스 확대

1. 장애인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2.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
3.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4. 장애인 주거지원 강화
5. 장애발생 예방 및 의료재활 강화

###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1. 생애주기별 교육지원체계 구축
2. 특수교육 지원강화
3.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4. 장애인 문화활동 활성화
5. 장애인 체육활동 강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 장애인 경제자립기반 강화

1.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2. 장애인기업 및 우수고용기업 지원
3. 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
4. 장애인 고용 인프라 확대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1. 장애인 정보접근성 강화
2. 장애인 이동·편의 증진
3. 장애인 인권보호 강화
4.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및 사회참여 활성화
5. 장애인정책 관련 국제협력 강화

- 장애인 복지 건강 분야



-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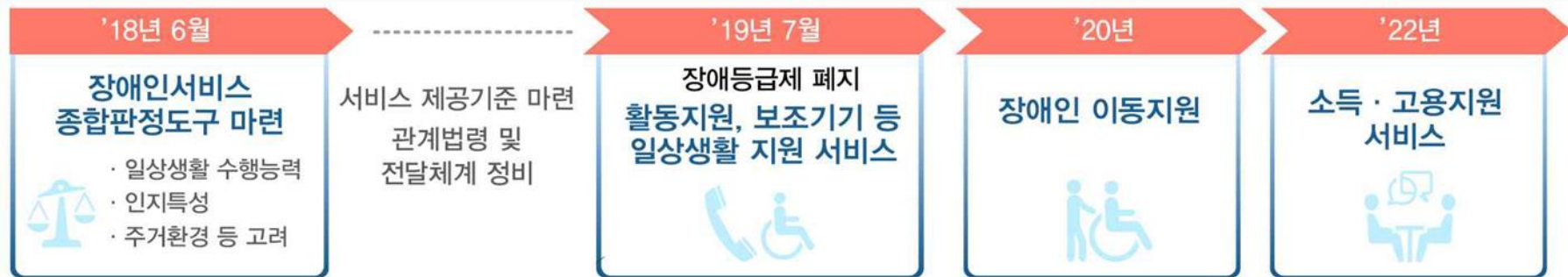
- 활동지원 급여(기본급여) : 9,267억원 → 12,268억원(3,308억원, 35.7%증)

- \* (대상) 연 평균 81천명 → 90천명(+9천명), (지원시간) 월 109.8시간 → 127시간(+17.2시간), (서비스단가) 12,960원 → 13,350원(390원, 3.0% 증)

## 2.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 배경 : '88년 도입 이후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지원기준으로 활용되어 오며, 전체 141개 장애인 복지서비스 중 79개 서비스가 장애등급에

- 따른 차등지원 주요 정책인 장애등급제 개편과 맞춤형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의 실현화



-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정책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해 각 분야별로 비장애인과 격차를 최소화하는 성과목표를 제시

- 이는 장애인의 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의 욕구, 환경을 포괄적으로 평가
- 종합조사표 : 기초상담, 복지욕구조사, 분야별 서비스 필요도 평가의 3개 영역으로 구성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건강관리 지원기반 마련

표 2. 종합판정도구의 단계적 도입 방안

시기	서비스 분야	서비스 내용
2019년 7월	일상생활 지원	활동 지원, 보조기기 지급, 거주시설 입소 자격 부여
2020년	이동 지원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2022년	소득·고용 지원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자료: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18. 3. 5.). 문재인정부 장애인정책, 70개 추진과제 확정. 보도자료.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2020. 9.9)

## <만19세 이상 성인용>

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
		①	②	③	④	
일상생활동작	1. 옮겨 앉기	0	3	6	18	7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앉은 자세 유지	0	4	8	24	
	3. 실내 이동	0	5	10	30	
	4. 실외 이동	0	7	14	42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5. 대중교통 이용	0	8	16	48	
인지행동특성	6. 주의력	0	12	24	-	
	7. 위험인식 및 대처	0	21	42	-	
계		- 39 - 228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2020. 9.9)

## <만 19세 미만 아동용>

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
		①	②	③	④	
일상생활동작	1. 옮겨 앉기	0	3	6	18	4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걷기	0	8	16	48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3. 대중교통 이용	0	9	18	54	
인지행동특성	4. 위험 인지하기	0	7	14	42	
계		162				



### Ⅲ. 욕구조사 및 급여이용 계획

1-1. 도움 내용	1-2. 도움 여부	1-3. 주로 도와주는 사람*	1-4. 이용희망 횟수	1-5. 이용희망 시간
<input type="checkbox"/> 신체수발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번 기타 : _____	( )회/월	( )시간/회
<input type="checkbox"/> 가사활동지원 (집안일 및 식사준비)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번 기타 : _____	( )회/월	( )시간/회
<input type="checkbox"/> 목욕지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번 기타 : _____	( )회/월	( )시간/회
<input type="checkbox"/> 이동지원(병원, 약국이동, 쇼핑, 산책, 친구, 이웃방문, 지역사회시설 이용, 종교활동, 문화, 여가활동, 여행하기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번 기타 : _____ —	( )회/월	( )시간/회
<input type="checkbox"/> 통학지원(등하교 이동지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 )번 기타 : _____	( )회/월	( )시간/회
<input type="checkbox"/> 학습보조(학교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 )번 기타 : _____	( )회/월	( )시간/회
<input type="checkbox"/> 통근지원(출퇴근 이동지원)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41 - ( )번 기타 : _____	( )회/월	( )시간/회

### Ⅲ. 욕구조사 및 급여이용 계획

1-1. 도움 내용	1-2. 도움 여부	1-3. 주로 도와주는 사람*	1-4 이용희망 횟수	1-5. 이용희망 시간
<input type="checkbox"/> 업무보조(직장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번 기타 : _____	( )회/월	( )시간/회
<input type="checkbox"/> 의사소통지원 (듣기, 쓰기, 전화사용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번 기타 : _____	( )회/월	( )시간/회
<input type="checkbox"/> 간호서비스지원(기관지 절개 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욕창간 간호, 도뇨관리 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번 기타 : _____	( )회/월	( )시간/회
<input type="checkbox"/> 기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번 기타 : _____	( )회/월	( )시간/회

- 종합판정도구의 특징 및 한계점

활동보조 인정조사표와 비교하여 기능제한 비중은 늘어나고, 사회활동 비중은 축소

- 활동보조 인정조사표 : 기능제한 비중 28%, 사회활동 비중 12%
- 돌봄지원 필요도 평가: 기능제한 비중 40.7%, 사회활동 비중 7.95%
- 장애특성이 반영되지 않음. 특히 감각장애특성 미반영
- 활동보조 인정조사표에 포함되어 있던 출산휴가급여, 탈시설 장애인 추가급여 누락
- 월평균 5시간 증가
- 최중증장애인 2시간 증가(하루급여 14.7시간 => 16.84시간)
-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24시간 활동지원이 보장되어야 하나 반영되지 못함

## \* 특징 및 한계점

- 등급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님
- 모든 서비스 사정으로 인한 서비스 사정 비용 증가
- 자립이 아닌 돌봄 강화로 장애인 서비스 대상으로 전략
- '사회환경'은 직업과 가구형태 두 가지만 반영, 개인적 특성, 개성, 취향 등 미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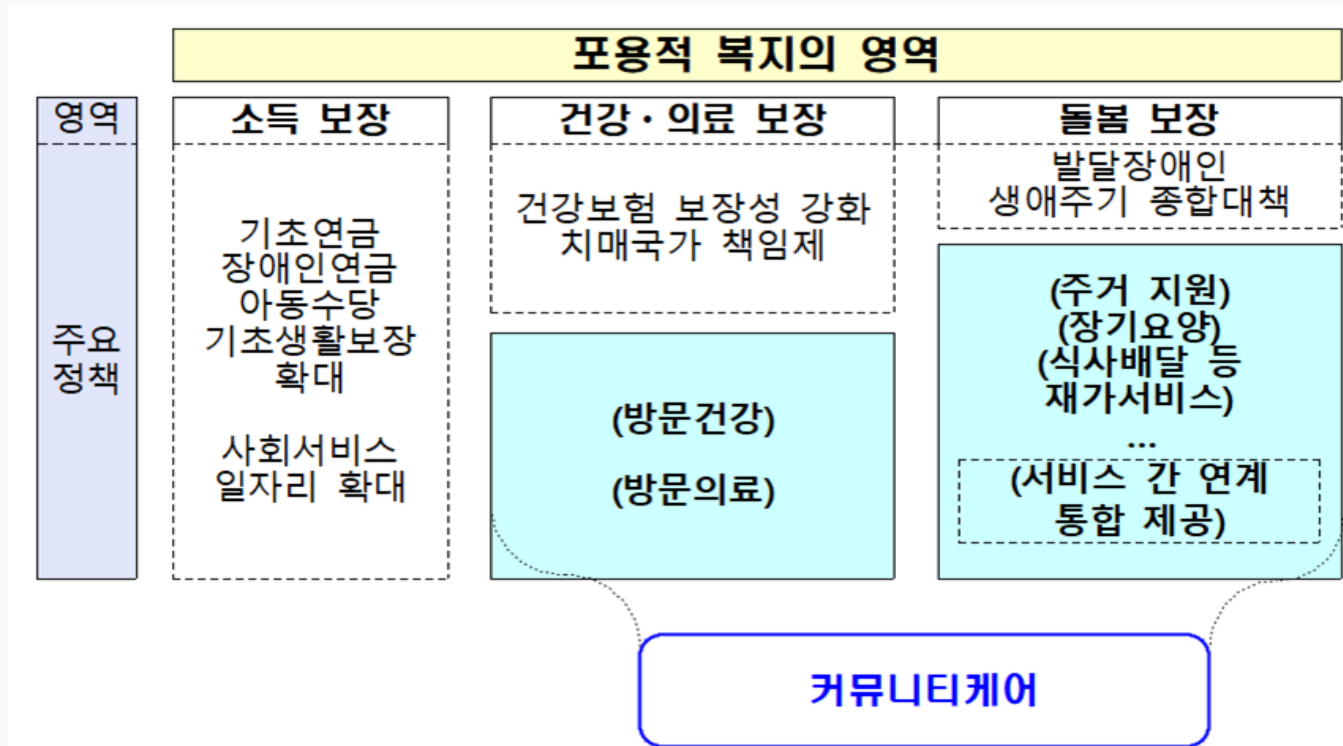
### 3.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

---

-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 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
- 커뮤니티케어 비전: ‘지역사회 힘으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

### 3. 포용적 복지정책 내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출처 : 2018. 11. 관계부처합동,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 계획 자료

## ① 돌봄, 복지 등 사회서비스 확충

1. 장기요양 등 돌봄서비스의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확충
2. 안전 관리 등 사회서비스 확충

## ②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체계 강화

1.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
2. 재가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 ③ 돌봄이 필요한 사람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1. 퇴원 후 재가복귀를 위한 경로 설정
2. 주거, 일자리, 소득지원 등 지역사회 정착여건 조성

## ④ 병원, 시설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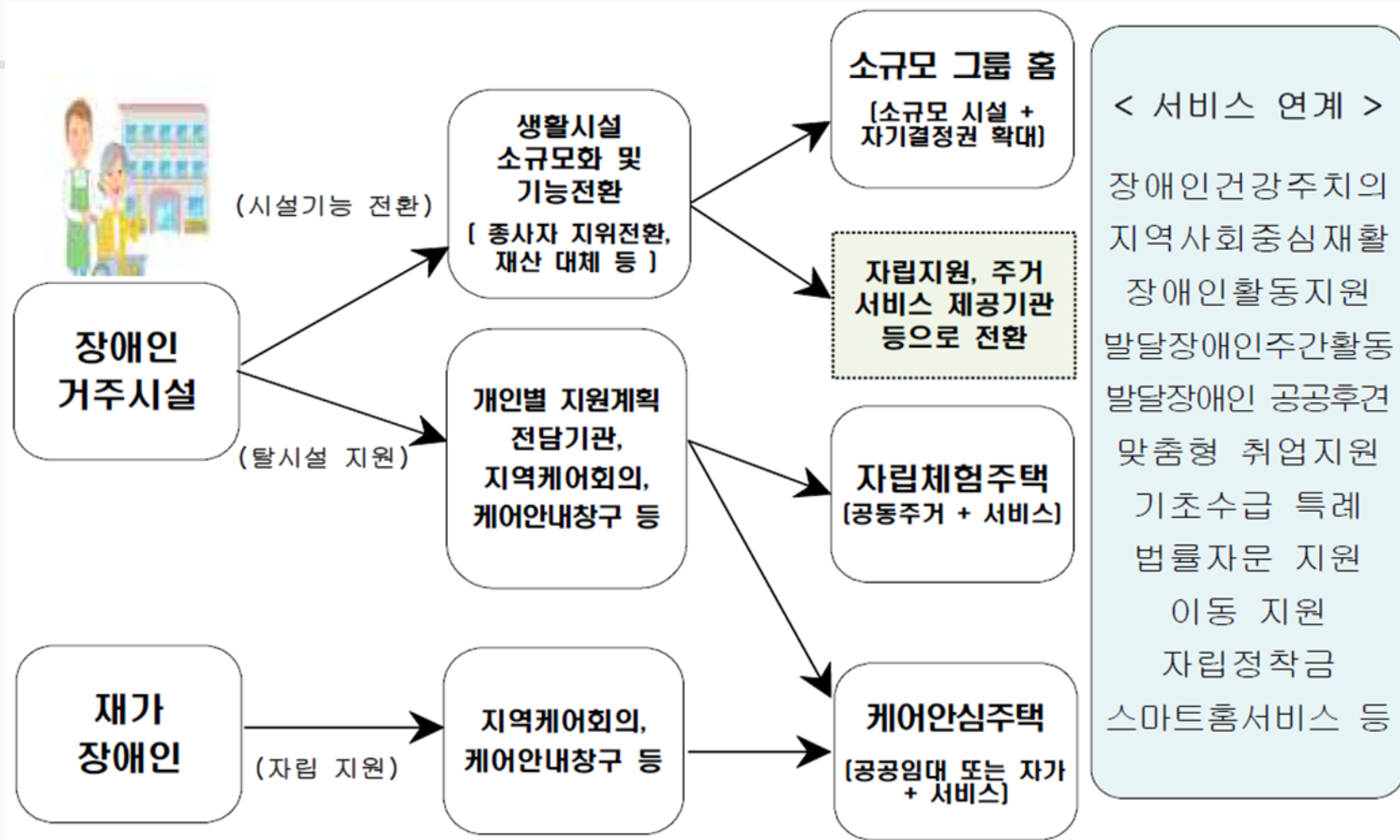
1. 합리적 서비스 공급 및 이용을 위한 기반 강화
2. 시설, 병원 등 평가체계 개선 추진



## ⑤ 지역사회 커뮤니티케어 인프라 강화 및 책임성 제고

1. 지역사회 민관 협력체계 구축
2. 커뮤니티케어 주체로서 지자체 역할 강화
3. 읍면동 케어통합창구를 통한 서비스 안내·연계 기능수행

# 장애인분야의 커뮤니티 케어 내용





## \* 장애인 분야의 커뮤니티 케어의 한계점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케어창구에서부터 일원화하여 통합적인 돌봄시스템 구축 방향성 부족
- 선도사업의 내용 대부분이 이미 지자체들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서 의거해 사업을 진행 중이 들이며, 지자체별 두드러진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함
- **보건 및 복지의 연계, 및 예산 부족**
- 케어 시스템 개편을 위한 법/ 제도 개선 ( 장애인거주시설, 병원 등 협조 필요)

### 3.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 Ⅲ 비전 및 목표

##### 비전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가 이루어지는 포용사회

##### 목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서비스 제공으로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 일자리·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확대
- 개인별 서비스 다양화로 만족도 향상 및 가족부담 경감



생애주기	추진 정책(10대 과제)
영유아기	① 영유아 발달장애 건강검진 강화 등 조기진단 강화 ② 영유아 발달장애 부모교육 등 조기개입 구축
학령기	③ 학령기 발달장애인 맞춤형 지원 강화 ④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및 부모 역량 강화 지원
청장년기	⑤ 커뮤니티 케어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⑥ 일자리 지원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중노년기	⑦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강화 및 건강서비스 확대 ⑧ 중노년기 발달장애인 위한 소득보장 체계 구축
전주기	⑨ 재활 및 문제행동 치료 등 발달장애인 의료접근성 강화 ⑩ 발달장애인 권익보호 및 부모·가족 정서적 지원

## 1) 의의

- 주간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주거생활코치를 통한 자립체험 임대주택
-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일자리를 통한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연간 2천여명  
발달장애인을 위한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 기존 5→ 2021년 20개소 ( 요양병원, 마트 등)
- 지역사회 돌봄인프라 강화
- 중노년기 발달장애인 소득 보장 체계 보장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30만원, 공공신탁 도입
- 발달장애인 권익보호 및 부모가족 정서적 지원 강화

## 2) 평가

-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가 아닌 돌봄의 대상으로 인식
- 발달장애인의 결혼할 권리, 자조단체를 구성할 권리, 정보 접근권 등 권리 보장 미흡
- 지적 장애를 중심으로 한 대책으로 자폐성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점
- 미등록 경계선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점
- 고기능성 발달장애인을 고려하지 않은 점
- 선도사업 이후 탈시설을 실제로 지원,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나 계획 미흡
- 주간활동서비스 활동보조시간 감소, 하루 4시간 정도,  
4000여명 이용, 현재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의 2% 미만

## 4. 의사결정지원

### 1) 장애인권리협약 상 “ 의사결정지원 ”

#### - 협약 제 12조(모든 장애인은 법 앞의 평등)와 성년후견제도의 관계

논점: 장애인이 누려야 할 법적 권한의 범위를 두고 제한적으로 법적 권한을 보장하자는 의견

비장애인과 평등한 수준에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의 대립

\* 협약은 모든 장애인이 자기결정을 위해 “의사결정지원”을 한다라고 할 때의 장애인을 법적능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임. 반면 성년후견제도는 본인을 대신하여 후견인이 “의사대행결정”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본인이 법적 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하는 시스템임 (오호철, 2015)

## 4. 의사결정지원

### 1) 장애인권리협약 상 “ 의사결정지원 ”

#### - 협약 상의 법적 능력과 의사결정지원

\* 협약에서의 법적 능력이란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포함할 뿐 아니라 나아가 그 밖에 사회활동에 완전하고도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능력내지 자격을 모두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

#### - 협약 12조가 요구하는 성년후견제도

\* 의사결정대행자(substituted decision-making)가 아닌 의사결정지원(supported decision-making)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

## 4. 의사결정지원

### 2) 특정후견사무수행의 개념과 후견인의 역할과 자세

- 피특정후견인이 주변 자원 및 금융, 의료기관 등의 특정후견에 관한 이해 저조
- 발달장애인이 자기결정권 주체라는 인식 필요

- UN장애인권리협약과 후견제도의 원칙 인식 필요

제3조 장애인의 인권존중( 성인은 언제나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의사결정능력상의 장애가 있더라도 비장애인과 다를 바 없이 대우해야 함, 이를 위해 잔존의사능력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 즉,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 시 의사결정대행자(substituted decision-making)가 아닌 의사결정지원(supported decision-making)자로 인식해야 함. 특정후견인에게 대리나 대행결정 권한이 부여된 경우에도 특정후견인은 피특정후견인인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하며, 특정후견인의 지원에도 피특정후견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을 경우 비로소 특정후견인의 대리나 대행결정이 행사되어야 함

## 5.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 1) 4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 : 시설 개편 및 자립생활 지원 중심

추진 과제	세부 계획
탈시설 후 자립생활 지원 강화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기능 강화 -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시스템 구축
장애인 거주시설 개편	-아용자 중심의 시설 기능 재정립 -시설 기준개선 및 이용 요건 완화(소득 수준제한 없음) -시설 소규모화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3) 제4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3~2017)



## 5.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 2) 5차 장애인 정책 종합 계획 : 탈시설 및 주거 지원 강화

추진 과제	세부 계획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 체계 마련	-탈시설 지원 전담 및 기존 복지 서비스와의 맞춤형 연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탈시설 장애인에게 공공임대 주택 제공 및 자립정착금 지원
새로운 거주 서비스 유형 개발	-일반 주택 내 그룹홈(체험홈) 설치 확대 -거주시설의 소그룹 시설 전환 추진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8)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2018~2022)

### 3) 거주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기본 계획

추진 과제	세부 계획
개인별 지원 계획	-지역 내 거주시설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욕구 조사 -대상자 발굴 및 종합 판정 후 개인별 지원 계획 수립
시설 기능전환 지원	-소규모 그룹홈(소규모 시설 및 자기 결정권 확대) -자립지원, 주거 서비스 제공 기관 등으로 전환
탈시설 지원	-자립체험주택(공동 주거 및 서비스) -케어안심주택(공공임대 또는 자가 및 관련 서비스)

자료 : 오욱찬 외(2019)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경로에 관한 연구 pp83. , 유동철 2019 제구성

## 【 참고자료 1 】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비교

구분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훈련) 등</li> <li>○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4조(지원), 제16조(자립생활주택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li> <li>○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자립생활지원)</li> </ul>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완전자립을 위한 경험과 적응 기회 제공</li> <li>• 주택권리 서울시 (운영사업자)에게 있음. 거주지에서 일정기간 자립 체험을 하는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 안에서 독립생활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주거서비스 지원</li> <li>• 주택 권리(소유 및 임차) 개인에게 있음.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주거서비스를 제공 받는 것</li> </ul>



## 장애인 정책 추진방향 및 애로사항

## 장애인에 대한 재가 서비스 확대 및 지원체계 통합

- 장애인복지관 2016년 12월 전국의 231개
- 주간보호시설 2018년 12월 기준 724개, 개소 당 직원 수 4.11명  
(이용자 12,248명, 시설 당 평균 17명)  
2017년 12월 기준 690개, 개소 당 직원 수 3.8명
- 직업재활시설 2016년 12월 기준 근로사업장 63개 시설에서 2,762명,  
보호작업장 516개 시설 14,335명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2019 국고보조금 1조 35억, 이용자 8만 1천명
- II 센터 약 250여개
- 장애인평생교육센터 2016기준 장애성인야학 및 특수학교 제외한 시설 185개소  
이와 기관 합계 252개소
- 주간활동서비스 2019년 3월부터 시작한 성인발달장애인 2,500명  
-> 2022년 17,000명으로 확대 예정

## 애로사항

- 지역사회 기반 인프라 및 자원 부족
- 시군구 차원에서 지역사회재활시설에서의 서비스 중복, 전달체계의 복잡성 증가
- 기관에서 이용자 권리 부재, 이용자 선택권과 실질적 서비스 계획 참여 미흡
- 이용자 욕구중심이 아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기관 중심, 서비스 간 유기적 연계 부족  
-> 서비스 전달 효율성 떨어지고, 여전히 최종증 발달장애인 이용의 사각지대 발생
- 유사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설계
- 연령( 아동, 노인), 성인 전환기 등 생애주기별 서비스 부족
- 이용자 욕구별 서비스 지원의 어려움
-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불확실, 지방자치단체 책임과 자율성 부족
- 불충분한 사회서비스, 서비스의 보편성 취약(대상자 한정/불필요한 자격기준 등)
- 행정적 편의, 칸막이 행정 기타 등등



과제 :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 V. 과제 :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 국제적인 장애인정책에 대한 이해
- 재활치료보다는 자립생활 개념( 개인의 선택과 자기결정) 이해
- 장애인의 성인시기 의미 있는 낮 활동, 일상생활 영위 (일자리, 여가 및 문화, 건강 등)
- 장애인의 행복한 이성교제, 결혼 준비 등 성적 자기결정권 지원
- 지역사회 주민들과 장애인의 진정한 사회통합, 이웃되기 및 관계 맺기
- 삶 전반의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실천
-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노후 지원 (주거, 신탁 등)
- 장애인의 학대, 폭력 예방 및 지역사회 장애인지원 기관 서비스 모니터링
- 지역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장애인 지원 인력에 대한 전문성 및 인권 감수성 제고





Thank you

